

민주당 “1주택자 거주 구분 없애야”… 종부세 개편 제동

고위당정협의회서 정부에 요청
“불가피한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이번주 수정안 최종 조율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23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과세기준을 살려주시 14억원, 비거주시 9억원으로 정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1주택자는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했다. 고위당정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주택 공급, 부동산 세제 개편, 중점 법안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에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채아배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협의회에 참석했다.

당정은 1주택자 종부세의 기본공제 과



한성숙 국무총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기준 가운데 거주·비거주 구분 외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는 국민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에 주는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세부담을 높일 경우 세부담이 우려되는 비거주 1주택자가 전·월세 가격을 높일 수 있어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안은 이번주에 가닥이 잡혀 정부안으로 성안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종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9월 1일에 세제 개편안이 보고되고 3일에 국회에 법안이 넘어오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에 가닥을 다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당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몇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실정 평가 대토론회 '벼랑 끝 서민·중산층, 흔들리는 대한민국'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한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고위당정은 주택 시장 안정의 핵심이 주택 공급 확대에 있다고 보고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당정이 적극 노력하고,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은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법 개정에서 나간다.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 재편으로 불안정해진 전월세 시장과 관련해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련된 권한을 이양 받아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당정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당협 재선출 놓고 내홍… 장동혁 쇄신안 차질

국힘 지도부·의원 이견으로 논의 중단
26일 발표 예정된 쇄신안 ‘빨간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투표를 통해 당협위원장들을 재선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당 지도부의 내부 의견 차이로 논의가 중단됐다. 아울러 비(非)당권과 의원에 대한 중징계 여파까지 겹치면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준비한 장 대표의 당 쇄신안 발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협위원장들의 임기를 기존 관례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하는 대신 일괄 사퇴 후 당원 투표 등을 거쳐 재선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일부 지도부의 반대로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후에도 회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두 차례의 비공개 회의에서도 지도부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당협 재선출 논의는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정정식 원내대표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2년차 실정 평가 대토론회 '벼랑 끝 서민·중산층, 흔들리는 대한민국'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답보 상태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당협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당 지도부가 논의한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안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장 대표는 개인 일정으로 이번 의총에는 참

석하지 못했다.

다만 최고위원들의 의결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지난 20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장 대표를 비롯해 김민수·김재원·양향자·조광한 위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져서다. 만약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의원들과 지도부 간의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李, 여당과 밀착 행보… 당청 공조 강화

내일 새 여당 지도부 청와대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당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하며 국정과제 입법이나 대야 대응 등 당청 공조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새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엔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 또 28일

엔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건의사항과 민심을 청취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 대표와 당권 도전을 했던 송영길·정청래 의원,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불러 만찬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여당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것은 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면서 집권 2년차 국정동력을 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릴 예정이며, 올해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국감이나 마찬가지이니 여당의 뒷

받침이 필수적이라서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며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공소취소 논란, 연임 프레임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과 손발을 맞춰 국정과제를 빠르게 추진해야 국정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대표 역시 이재명 정부 국정 뒷받침 의지를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취임 후 빠른 속도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용기·권미경 최고위원을 지명하고,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에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용해 당청 공조 기조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서예진 기자 syj@

용산공원 두고 대치… 26일 본회의 분수령

與 “청년 주거” vs 野 “국가공원 훼손”

정부에서 서울 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용산구 캠프킴(전 주한미국 주둔지)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이번주 26일 본회의를 열고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 후속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는 내용이고, 도시재정비특별법(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정책조정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검토 단계부터 난개발이라 어깃장을 놓을 일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서리풀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런데 녹지로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공원 부지의 활용 방안은 검토조차 반대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용산을 바라보는 기준을 청년의 삶으로 바꿔주라”며 “녹지 보존과 청년의 기회, 둘 다 살릴 수 있는 길을 함께 찾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때 미래세대에게 녹지를 제공하겠다는 원칙도 저버리고 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이 징벌적 과세와 공급 절벽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 국가 공원을 같이놔야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며 “국토부는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반한 부지 전체를 주택 후보지로 밀어붙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으로 녹지 보존을 못박았고, 문재인 정부도 주변 부지를 공원에 편입시켰다. 진보 정권 스스로 세운 원칙을 건어찬 자기당착”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뻔뻔하게 청년 주거 현실을 핑계로 댄다. 인근 국군재정비리단 등 당장 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체 국유지 제안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며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부동산을 초토화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시장 원리를 무시한 땀집 처방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백년대계 국가공원을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본회의 때 민주당이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입법 지연 전략을 펼칠 것도 검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천준호·김승수 민주당·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두고 조율하고 있는 만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한 주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 지난 20일 만나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고 이번주에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박태홍 기자